

V. 독일

□ FY2011 : 2011. 1~2011. 12

□ 2011년도 독일 예산안:

- 2010년 7월 정부 2011년 예산안 및 2010-2014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2010년 9월 14일 의회 심의 시작
- 2010년 11월 26일 의회 심의 통과

□ 출처 :

- Bundeshaushalt 2011, Finanzplan des Bundes 2010 bis 2014 (2011. 7)
-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www.bmas.de)
- Statistisches Bundesamt (www.destatis.de)
-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2010. 11)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10)
- OECD, Economic Outlook (2010. 11)
- Kiel Institute (www.ifw-kiel.de)
-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www.cesifo-group.de/)

□ 환율 : 1유로 = 약 1,533.09원(2010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9년 경상GDP 2조 9,753억달러(우리나라 2.3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9년 기준 76.7%(우리나라 95.9%)

□ 인구 : 8,187만명(2009년 기준)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1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2.2%, 실업률은 6.7%로 전년대비 0.6%p 하락, 물가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2011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3,058억유로로 추정되며,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2,574억유로, 신규차입은 약 484억유로로 전년에 비해 39.7%나 감소

◇ 예산기조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부터 긴축예산과 재정건전화계획 실시하며,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신규차입규모를 줄여 2016년까지 재정목표(GDP의 0.35%이하)를 달성할 계획
- 사회보장 지원 및 공공부문 지출 축소, 에너지산업 부문 세율조정 등을 통한 강력한 긴축재정을 실시

◇ 예산안 내용

- 2011년도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차입금이 대폭 감소하여 총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
- 총 재정지출은 3,058억유로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규모이며,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절감분이 가장 큼(8.3%)

◇ 주요정책

- (경제위기 대응 및 경제성장) 2010년도 독일경제는 회복기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2011년도부터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정책을 실시
- (재정건전화) 독일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Zukunftspaket)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함
 -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를 통해 연방 및 주 정부의 현 재정상황과 재정운용계획을 파악하고, 예산 모니터링 실시
- (복지관리정책) 독일정부의 2011년 긴축예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복지관리정책 실시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1. 27	FY2009 1차 추경 결정	재정동향 1호
2009. 1. 30	FY2009 예산 발표	
2009. 5. 27	FY2009 2차 추경 결정	
2009. 6. 24	FY2010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09-13) 정부 발표	
2009. 7. 2	FY2009 예산안 하원 통과	
2009. 7. 10	FY2009 예산안 상원 통과	
2009. 12. 16	FY2010 수정예산안 발표	
2010. 1. 19	FY2010 예산안 제1독회	재정동향 2호
2010. 1. 19	FY2009 결산 잠정완료	
2010. 3. 5	FY2010 예산 하원 통과	
2010. 3. 26	FY2010 예산 상원 통과	재정동향 3호
2010. 7. 7	FY2011 긴급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10-14) 정부 발표	
2010. 9. 14	FY2011 긴급예산 하원 심의 시작	재정동향 4호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2011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2%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낮으며, 소폭의 물가상승과 실업률 감소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2011년도 독일은 2%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0년도의 3.6%보다 1.6%p 하락한 수준
 - (수출) 2010년 경제호황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은 2011년에는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 및 투자) 위축됐던 민간소비가 회복하며, 설비투자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실업률) 2010년 12월 연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자 수는 301만 6천명이고 실업률은 7.7%로 집계되었으며, 2011년에는 0.4%p 하락한 7.3% 전망

<표 V-1>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단위: %)

	EU 집행위원회		IMF		독일중앙은행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GDP 성장률	3.7	2.2	3.3	2.0	3.6	2.0
CPI ¹⁾	1.1	1.8	1.3	1.4	1.1	1.7
실업률	7.3	6.7	7.1	7.1	7.7	7.3
수출 ²⁾	14.7	6.6	-	-	14.7	7.6
수입 ²⁾	13.4	7.2	-	-	14.1	7.6

주: 1) CPI: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 수출/수입: 재화 및 용역에 해당

자료: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2010. 11

IMF: Economic Outlook, 2010. 10

독일중앙은행: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2010. 12

나. 재정전망

1) 세입 및 세출전망

- 2010년 7월 독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2014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당초 정부안에 비해 16억유로 삭감된 3,058억유로로 확정
- (재정수입) 2011년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2,574억유로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7.6% 증가한 규모
 - 이 중 조세수입은 약 2,295억유로로, 전년 대비 176억유로 증가
 - (재정지출) 2011년 재정지출은 3,058억유로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3% 감소한 규모
 - (신규차입) 2011년도 신규차입은 약 484억유로로 예상되며, 이는 2010년의 802억유로는 물론, 당초 정부안 575억유로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2011년부터 신규차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상 2014년까지 약 241억유로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

<표 V-2>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2010~2014년)

(단위: 10억유로, %)

	2009	2010 (추정치)	2011 (예산안)	2011 (확정예산)	중기재정계획		
					2012	2013	2014
I. 재정지출	292.3	319.5	307.4	305.8	301.1	301.5	301.1
전년대비 증가율(%)	3.5	9.3	-3.8	-4.3	-2.1	0.2	-0.1
II. 재정수입	292.3	319.5	307.4	305.8	301.0	301.5	301.1
조세 수입	227.8	211.9	221.8	229.5	232.8	241.8	250.3
세의 수입	30.2	27.4	28.1	27.9	28.1	28.1	26.7
신규 차입	34.1	80.2	57.5	48.4	40.1	31.6	24.1
III. 투자지출	27.1	28.3	33.8	32.3	29.0	26.4	26.0

자료: 독일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0 bis 2014, 2010년 8월

2) 독일정부 재정수지

-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한 독일 연방정부의 2011년 재정수지는 2010년에 비해 개선된 GDP 대비 -2.3~-2.9%로 예상
 - IMF와 OECD는 물론, 자국 내 경제연구소(IFO, KIEL) 모두 당분간 적자재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09년에 이어 2010년까지 3%대로 악화되던 재정수지는 2011년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이는 2011년까지 최고 GDP 대비 5%대의 재정적자를 전망했던 작년 전망치보다 대폭 개선된 상황

<표 V-3>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IFO	0.1	-3.0	-3.5	-2.3	-
KIEL	0.0	-3.0	-3.3	-2.9	-2.4
EU 집행위원회	0.1	-3.0	-3.7	-2.7	-1.8

자료: IFO: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KIEL: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EU 집행위원회: Economic Forecast, 2010. 11

3) 독일정부의 부채비율

- 독일정부가 예상한 2010년도 부채비율은 GDP 대비 75.7%였으며, 2011년에는 75.9%로 0.2%p 상승할 것으로 전망
- IMF의 2010년 가을 전망에 따를 경우에도, 부채비율은 GDP 대비 75.3%로 독일정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며, 2015년에는 75.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이는 2013년까지 부채비율이 GDP 대비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던 2009년도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수치

<표 V-4>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IMF/EU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IMF	64.9	66.3	73.5	75.3	76.5	-	75.6
EU집행위	64.9	66.3	73.4	75.7	75.9	75.2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년 10월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2010년 10월

2. 예산기조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부터 긴축예산과 재정건전화계획 실시
 - Schäuble 재무부 장관은 2011년도 예산안 연방하원 심의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최근의 경제성장에 관한 긍정적 신호가 독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2011년이 정부지출과 신규 부채를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재정건전화를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신규차입규모를 줄여 2016년까지(독일 기본법 상의)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계획

-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지출 감소와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을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부문의 과감한 투자도 가능하게 됨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보장 지원 및 공공부문 지출 축소, 에너지산업 부문 세율조정 등을 통한 강력한 재정 긴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1년 112억유로 감축을 시작으로 2011~2014년까지 총 817억유로를 절감할 계획(2010년 GDP의 약 3.4%)
 - 실업보험금 축소, 연금 감축 등 복지분야 지출을 가장 크게 감축(2014년까지 전체 지출감축금액 531억유로의 57.2%인 303억유로 절감)

<표 V-5> 독일정부의 향후 적자감축계획

(단위: 억유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누계	(비중)		
계		112	192	237	276	817	100.0		
지출 감축	복지	30	70	94	109	303	531	37.1	64.9
	일반행정	23	33	39	39	134		16.4	
	기타(국방)	6	11	27	50	94		11.5	
세입 증대	감면축소	20	25	25	25	95	287	11.6	35.1
	환경세 등 신설	33	53	53	53	192		23.5	

자료: 독일 재무부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내역

- 2011년도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신규차입은 대폭 감소하여 총재정수입은 3,058억유로로 전년 대비 4.3% 감소
 - 신규차입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2,574억유로로 전년 대비 7.6% 증가
 - 조세수입은 총2,295억유로로 전년 대비 176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79억유로로 전년에 비해 5억유로 증가
 - 에너지 관련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항공여행시 부과하는 항공세와 원자력 발전 건설시 부과하는 환경세, 금융거래세 등을 신설하여 세수 확충 계획

<표 V-6> 연방정부 2011년도 예산

(단위: 10억유로)

	2009	2010	2011(정부안)	2011(확정)
I. 재정지출	292.3	319.5	307.4	305.8
전년대비 증가율(%)	3.5	9.3	-3.8	-4.3
II. 재정수입	292.3	319.5	307.4	305.8
조세 수입	227.8	211.9	221.8	229.5
세외 수입	30.2	27.4	28.1	27.9
신규 차입	34.1	80.2	57.5	48.4
III. 투자지출	27.1	28.3	33.8	32.3

자료: 독일 재무부 2010년 12월

나. 세출내역

- (노동 및 사회복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 및 사회분야의 2011년도 예산은 1,313억 유로로서 2010년에 비해 약 8.3%(119억유로) 감소함
 - 생활보호대상 수급자에게 지불되던 연금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삭감
 - 2011년 연금보험 관련 예산은 2010년보다 6억유로(0.8%) 감소한 801억유로
 - 연금 수혜자 중 월 1,240~1,800유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축소

<표 V-7> 2011년 독일연방 부처별 예산현황

(단위: 10억유로, %)

부처	2010	2011	증감률(%)
총리실	1.8	1.8	-0.1
외교부	3.2	3.1	-2.8
내무부	5.5	5.4	-1.6
법무부	0.5	0.5	0.8
재무부	4.9	4.5	-8.2
경제기술부	6.1	6.1	-0.1
농업/소비자보호부	5.8	5.5	-5.9
노동/복지부	143.2	131.3	-8.3
교통건설부	26.3	25.2	-4.1
국방부	31.1	31.5	1.4
보건부	16.1	15.8	-2.2
환경부	1.6	1.6	2.9
가족부	6.5	6.5	-1.1
후진국지원부	6.1	6.2	2.5
교육부	10.9	11.6	7.2
연방부채	38.9	37.2	-1.7
기타	10.9	11.9	0.1
합계	319.5	305.8	-4.3

자료: 독일재무부, 2010. 12(확정예산)

- 실업상태에서의 창업보조금을 폐지하고, 실업자수당 I에서 II로 넘어가는 과도기 수당 폐지하는 등 장기 실업급여 혜택 축소 및 실업급여를 법정(의무)지출에서 재량지출로 전환

- (연방 채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방채무는 연방정부가 지니고 있는 채무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2011년도에는 372억유로가 책정되어 전년에 비해 4.3%(17억유로) 감소

- (국방) 국방분야의 예산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2011년에는 우선 2010년에 비해 1.4%(4억유로) 증액된 315억유로 책정

- 40,000 여명의 군 인력 감축 등을 통해 2012년부터 국방분야의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정

- (건설 및 교통, 도시개발) 2011년도 책정된 예산은 252억유로로 2010년도에 비해 약 4.1%(11억유로) 감소
- (보건) 주로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금을 사용되는 보건분야의 예산도 2010년에 비해 2.2%(3억유로) 줄어든 158억유로로 책정

- (교육 및 연구) 전반적인 긴축예산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유일한 예산항목으로, 2011년에는 2010년보다 7.2%(7억유로) 증가한 116억유로로 확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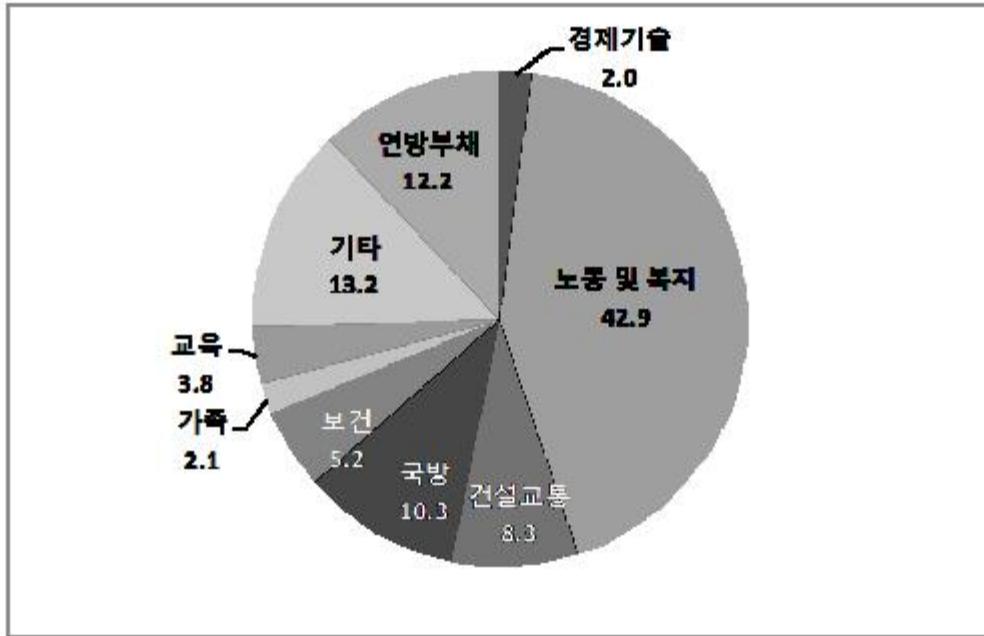
- (가족지원) 가족지원 분야의 2011년도 예산은 전년에 비해 1.1% 감소한 65억유로
 - 육아수당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대 14개월간 300유로가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폐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등의 혜택을 축소

- (내무부) 2011년도 내무부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6% 감소한 54억유로로 확정
 - 공무원 1만 5000명 정원감축 및 임금 삭감 등을 통해 행정비용을 감축하여 예산 절감

- (재무부) 2011년도 재무부 예산은 전년 대비 약 8.2%(4억유로) 감소한 45억유로로 확정

[그림 V-1] 독일 연방정부 2011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자료: 2011년 예산안, 독일 재무부, 2010. 11. 23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부양/경제성장 정책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일 정부는 위기 이전의 상태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정건전화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성장 친화적인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사회복지 관련 정부지출을 절감하는 재정건전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업자들에게 구직 인센티브를 늘리고 효율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고 밝힘
 - 또한 긴축재정은 자국 내 물가상승 및 임금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나. 재정건전화

<독일의 재정건전화정책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2. 13	부채비율 감소 위한 2011년 이후 재정건전화정책 제시	재정동향 1호
2009. 7	재정건전화 달성 위한 헌법(독일기본법) 개정	재정동향 2호
2010. 2. 9	재정안정화프로그램 발표	
2010. 4. 28	안정화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6. 7	긴축재정안 발표	재정동향 3호
2010. 9. 5	재정건전화계획 채택	재정동향 4호
2010. 10. 15	안정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연방정부는 재정건전화계획(Zukunftspaket)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함(2010. 9)

- 예산을 수반한 법률의 형태로 마련된 재정건전화계획의 실시로, 2011년 이후 헌법상의 부채-역제 규율을 충실히 지켜, 중앙정부의 구조적 적자를 500억유로 이하로, 나아가 2016년까지 100억유로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가장 중심이 되는 예산지원법(Haushaltsbegleitgesetz 2011)안은 신설될 항공세의 근거법률인 항공교통통제법 제정 및 에너지세법 등 20개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포괄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시 2011년에는 35억 6백만유로의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확보됨
- 기타 핵연료세와 금융시장거래세 등 법안이 예산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으며, 2011년 총 112억 6백만유로의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표 V-8> 재정건전화계획의 개요: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액 추이

(단위: 백만유로)

	2011	2012	2013	2014
예산지원법	3,506	5,390	5,680	4,810
항공교통통제법 제정	1,000	1,000	1,000	1,000
에너지세-전력법 개정	1,340	1,160	1,500	1,500
파산법 개정	191	215	215	215
양육수당 개정	605	605	595	575
기타	370	2,410	2,370	1,520
핵연료세	2,300	2,300	2,300	2,300
금융시장거래세	-	2,000	2,000	2,000
행정경비 절감 등	5,400	8,900	13,600	17,400
총계	11,206	18,580	23,580	26,510

주: 연방정부만을 포함한 내역

자료: 독일 재무부, Übersicht Umsetzung Zukunftspaket(2010. 9)을 재구성

- 연방재무장관 및 각 주 경제장관 등으로 구성된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는 2010년 10월 15일 베를린에서 예산 모니터링과 관련된 제2차 회의를 개최함
- 동 위원회는 연방 및 주 정부의 현 재정상태와 재정운용계획을 파악하고, 헌법상의 차입 제약이나 중기 전망치를 비교하여 평가함
 - 위원회의 보고서는 베를린 등 4개 주의 예산 지표와 중기 전망치 등이 재정위기를 경고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와 연방정부의 경우 재정위기 발생의 우려는 없다고 발표함
 -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Berlin, Bremen, Saarland, Schleswig-Holstein 주에는 ‘안정성위원회법’(Stabilitätsratsgesetz) 제4조 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독일정부의 2011년 예산안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보장 분야의 예산 감축안은 2014년까지 4년간 총 303억유로로 전체 지출감축 금액 531억유로의 57.2%를 차지함
 - 독일정부는 지출 감소와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을 안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 연구부문의 과감한 투자도 가능하다는 계획

- (의료 관련) 보건분야의 예산도 2010년에 비해 2.2%(3억유로) 줄어든 158억유로로 책정

- (연금 관련)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연금보험의 국가지원 삭감
 - 2011년 연금보험 관련 예산은 2010년보다 6억유로(0.8%) 감소한 801억유로
 - 연금 수혜자 중 월 1,240~1,800유로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축소(소득대체율 67 → 65%)

- (기타 복지 관련) 육아수당의 단계적 감축과 장기 실업 수당 혜택의 축소
 - 최대 14개월간 월300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을 폐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지급하는 양육보조금 등의 혜택을 축소
 - 실업상태에서의 창업보조금을 폐지하고, 실업자수당 I에서 II로 넘어가는 과도기 수당 폐지하는 등 장기 실업 수당 혜택 축소
 - 실업급여를 법정(의무)지출에서 재량지출로 전환
 - 실업급여 수혜자 중 노령연금 이중수혜 일부 폐지
 - 독일의 실업보험은 보험료로 충당하는 사회보험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보조로 구성되며, 이 중 사회보조 수혜자의 노령연금 이중수혜 일부를 폐지